

# KMI 동향분석

**VOL.78**  
2018 March

발간년월 2018년 3월(통권 제78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감 수 하동우 인포그래픽 김태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협력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 전국 해양수산 현안과 정책 공유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본격적 돌입 - 2018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최지연 해양수산 지역발전 연구센터 부연구위원  
(jychoi@kmi.re.kr/051-797-4713)  
전현주 해양수산 지역발전 연구센터 연구원  
(hyunjj@kmi.re.kr/051-797-4720)  
강창우 해양수산 지역발전 연구센터 연구원  
(kangchang@kmi.re.kr/051-797-4740)  
김종덕 정책동향연구본부장  
(jdkim65@kmi.re.kr/051-797-4751)  
홍장원 해양관광·문화연구실장  
(jwhong@kmi.re.kr/051-797-4721)  
박상우 해양수산 지역발전 연구센터 부연구위원  
(swpark@kmi.re.kr/051-797-4562)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3월 26일에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이하, 2018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는 해양·연안지역의 현안을 제시하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 해양수산의 열린 광장’이라 할 수 있다.

2018 대토론회는 문재인정부의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해양수산 부문의 실천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해양수산의 혁신성장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11개 시·도에서 제시한 지역 해양수산 현안과 혁신성장사업, 정책제언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본 행사는 해양수산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중앙-지역정책간의 강한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본 행사에서 KMI는 2017년 대토론회를 계기로 결성된 ‘해양수산 전국포럼’의 성과인 각 시·도연구원과의 지역세미나 개최와 공동연구의 이행실적을 설명하였고, 2018년 전국포럼의 운영방향을 ‘균형발전과 지역혁신’, ‘균형발전과 재정분권’, ‘해양수산 지역연구의 큐레이션’에 두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2018 대토론회의 주최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양창호 원장은 ‘해운·조선업 위기, 항만도시의 쇠퇴, 수산업·어촌의 위축 등 지역의 위기와 현주소를 진단하고, 해양수산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KMI는 ‘해양수산 지역발전 연구

---

센터'를 중심으로 해양수산 지역연구를 시도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이행함으로써 생산적인 해양수산 지역정책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훈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21세기의 해양수산은 국가와 지역경제는 물론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분야로, 해양연안지역 개발에 역량을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국제질서가 개편되는 현 시점에서 국내 해양신산업과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대책마련과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육동한 강원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해양의 이용·개발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로, 과거엔 물류와 어업으로만 이용했다면, 현재는 해양관광·레저스포츠, 첨단양식, 해양자원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해양의 체계적·효율적 활용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육동한 원장은 해양이 인접한 산림과 연계하면 최고의 힐링과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하였다.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은 문재인대통령의 말씀인 '해양강국은 포기할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대한민국은 대륙과 해양을 이을 때 원대한 꿈을 꿀 수 있다.'를 인용하면서, 바다는 국가경제의 큰 축이자 삶의 터전임을 강조하였다. 다양한 빛깔과 특성을 가진 바다와 같이 모든 해양연안지역의 바다도 저마다의 강점과 개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발전해야 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균형발전과 지역특화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상생 전략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해양수산 지역혁신성장은 국민수요를 반영한 국민생활밀착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전국에 산재한 2,400여개의 소규모 항·포구를 대상으로 한 '어촌뉴딜 300'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력,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밝혔다.

성경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비전'이란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우리나라는 인구소멸·민족소멸·세계소멸이라는 3대 소멸위기와 불균형 성장·고용위기·저성장·지구온난화라는 4대 중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세계패러다임의 대전환기 속에 대한민국이 나가야할 비전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공동번영과 평화의 한반도', '세계 모범국가'로 제시하였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향한 제2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선진국으로 나가는 힘인 '글로벌 소프트파워(문화·지식·평화환경)'을 키울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하였다.

제1부에서는 '해양도시와 해양관광 활성화'란 주제로 2개 전문가 주제발표와 부산, 인천, 경기, 충남, 제주, 충북의 토론이 있었다.

제1부에서는 김종덕 KMI 정책동향연구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가 해양성을 활용한 활동이 파편적이고 제한적 이용에 그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양도시의 도입 필요성과 국내외 해양도시의 여건과 방향에 대해 소개하였다. 신 해양도시의 조성을 위해 해양도시 체계 구축과 특성화, 해양권역별 네트워크 해양도시 구축, 해양도시 소프트 인프라 조성, 해양수산지 역혁신 역량 강화 등 4가지 전략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홍장원 KMI 해양관광·문화연구실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관광도시와 관광도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해양관광을 지역발전 전략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는 것을 지적하며 해양관광을 지역발전의 토대가 되기 위한 고민과 해결방안에 대해 소개하였다. 관광시장의 변화에서 해양관광의 시장변화, 국내 해양관광의 현황과 발전과정, 해양관광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홍장원 실장은 지역 해양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해양관광도시 브랜드 구축, 해양공간의 접근성 개선, 지역자원의 발굴·활용 등을 제안했다.

제1부 종합토론은 부산, 인천, 경기, 충남, 제주, 충북의 해양수산 관련 국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부산, 해양관광·레저산업의 거점도시로서 도약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고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완화 및 개편을 제안하며 해양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상레저업의 규제완화와 지자체 권한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인천, 항만보안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다양한 해안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대규모 배후단지, 접경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개발을 모색하며 해양관광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계획을 소개하였다.

경기, 지역의 해안에 대한 관심이 육지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지만 2,500만 인구의 관광수요와 지속적인 해양관광을 위한 과제 발굴 노력을 발표하였다. 또한 경기도 내 평택항이 항만물류 중심에서 친수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평택항 종합발전계획을 제안하였다.

충남, 현재 지역의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연안지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귀어·귀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소개하였다. 지역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새로운 인력을 유입하고 이를 원동력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는 어촌개발사업이 제외되는 연안 읍면동에 대한 확대를 제안하며 보다 적극적인 어촌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제안하였다.

제주, 지방분권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해양자치권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지자체의 권한 이양에 대한 단계적인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크루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내국인 수요 및 인식 확산을 위한 전 국가적인 노력을 강조하였다.

충북, 국토중앙에 위치하여 해양과 동떨어진 위치임에도 내수면 자원을 활용한 관광 및 어업활동에 적극적인 계획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관광활동과 지역주민의 이용공간이 상충되고, 지역간 자원 확보를 위한 요구가 이어져 갈등 양상을 빚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주민들과의 공간공유, 소득공유를 통한 내수면 자원을 활용한 관광 개발을 제안하였다.

제2부에서는 ‘수산·어촌지역의 혁신생태계 구축’의 주제로 3개 전문가 주제발표와 전남, 경남, 강원, 경북,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토론이 있었다.

제2부에서는 박상우 KMI 해양수산지역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이 우리나라 어촌지역이 가져 가야 할 지역재생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2010년 이후 귀어·귀촌에 따른 역도시화

---

현상이 발생하여 어촌지역으로의 인구 순수입효과가 나타났으나, 도서어촌지역 인구는 늘어나는 반면에 비도시어촌지역의 인구는 감소·정체함에 따라 연안지역 인구 분포의 불균형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인구감소·지방소멸에 따라 나타나는 열악한 공공서비스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하드웨어적 인프라 확충만이 아닌 소득과 일자리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제2부 두 번째 발표자인 양동우 호서대학교 교수는 해양수산생태계 가치사슬 이야기와 해양수산 스타트업, 벤처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발표하였다. 창업벤처 생태계의 성공 사례인 실리콘밸리와 국내 창업벤처 지원 체계의 비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수인력 양성 및 어촌 유입 유도, 양식산업 활성화, 고가격/고품질의 수산물 생산, 어촌해안공간의 스타트업 밸리화를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였으며, 시장 및 지역의 요구에 맞는 지원과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지역개발 등의 지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재정과 지역발전에 관하여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지방세제 조정,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지방소멸에 대한 인구변수 중 가임여성인구에 초점을 맞춰 지방소멸 과정을 분석·전망하였으며, 여성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인구위축의 문제점을 소개하였다. 또한 인구고령화·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세원구성 조정은 불가피하며, 인구감소지역의 세입 축소에 따른 재정지원체계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제2부 종합토론에서는 ‘수산·어촌지역의 혁신생태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전북, 전남, 경남, 경북, 강원, 대구·경북의 해양수산 관련 국장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해양수산 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하였다.

전북, 새만금 신항만 건설에 따른 해양산업 확대 및 창업기회를 도모하며, 어촌지역 경제력 강화를 위한 발전계획 수립, 정주여건 개선, 어촌관광 활성화, 어업인 소득증대 및 경영안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제언으로는 소득어종 자원감소 대책 마련의 필요성,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 및 청년어업인 적극 육성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전남, 어촌지역 재생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 주민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연안여객선 이용객 1,000만 시대 도래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 확충 및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 제도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어업인 후계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관련 도(道) 추진사업을 통한 청장년층의 안정적인 어촌정착 유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남, 수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패류양식산업 클러스터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경남은 미국 FDA 수출용 패류생산지정해역의 75%를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향후 패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가공·위생·유통·수출 통합형 양식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소개하였다. 이로써 패류양식업 고도화, 경쟁력 확보로 수출시장 전략적 개발 및 수출 증대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

강원, 어로한계선,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수산업 발전이 저해됨을 언급하였

---

---

으며, 동해안 해양수산 발전방안 모색으로 동해안 특성을 활용한 고품질 수산물 생산, 청정 해양환경의 가치 중요성을 부각하겠다고 언급하였으며, 미래 전략품종 육성·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산식품 산업 육성 및 명품브랜드화와 어촌·어항 중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구·경북, 동해안 수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개편과 정책 수립 현황을 소개하였으며, 관광단지 조성, 6차 산업화, 자원보호 및 특화양식품종 육성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하였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동해안의 해양기능 확대, 수산자원 회복, 어촌개발, 관광지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은 육지보다 더 심각한 소멸위기지역인 섬에 대한 정주공간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입지적인 불리성, 교통 불편성 등 정주환경 여건 개선과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의 필요성을 소개하였다. 섬 지역 정책방향으로 주민의 관점에서의 발전정책 추진, 도서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서민의 법개정 수요를 폭넓게 반영하는 제도 개편 등을 제안하였다.

2018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의 시사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18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는 ‘해양수산 전국포럼’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구성된 것으로, 전국포럼은 지역 해양수산의 혁신성장과 공동발전을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도연구원, 사·도, 지역대학 등과 국토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해 해양수산 지역발전의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둘째, 도시와 어촌, 해양산업과 기술, 산·학·연, 중앙과 지방, 타 분야와의 연계강화를 통해 해양수산 지역혁신성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양수산의 가치와 잠재력을 해양·연안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공간·산업·주체·부문간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양수산 지역혁신성장의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함께 인식하였다.

셋째, 각 사·도에서 이행 중인 해양수산 관련 정책과 사업이 지역혁신성장에 기여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 지역발전과 관련한 공동의제 발굴이 필요하고, 해양수산 지역혁신성장 관련 공동의제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지역의 장점과 역량 등을 고려해 지역맞춤형 실천과제 발굴과 이행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사·도에서는 해양수산 혁신성장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려 하고 있으나, 지역 해양수산 전문 인력의 부족, 해양수산 연구·교육·훈련 관련 기관의 지역적 편중 등이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지역 해양수산 균형발전과 지역정책·사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해양 관련 전문인력 유입·양성, 해양수산 관련 지역연구소·대학, 해양수산 기업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등 지역 소프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

# 특별강연: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비전

성경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세계와 우리나라는 대전환기에 돌입

### ■ 세계 평화정착과 제4차 산업혁명 등 대전환기 과정 속에 우리나라는 3대 소멸위기와 대면

-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 인구 5,000만 명 이상 소득 3만 달러 이상의 세계 7위 수준인 우리나라는 세계 강국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키워나가기 보다는 세계 평화정착과 제4차 산업혁명 하에 진행 중인 대전환기에 새로운 기적을 모색해야 함
- 우리나라는 3대 소멸위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 평화정착 기회의 창은 열렸으나 여전히 불안한 안보에 따른 ‘민족소멸’,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 야기되는 ‘세계소멸’에 처함

## 불균형 성장, 고용위기, 저성장, 지구온난화는 4대 중대 도전에 직면

### ■ 우리나라는 4대 중대 도전과제, ‘불균형 성장과 한국의 비극’, ‘4차 산업혁명과 고용위기’, ‘저성장과 경제적 불안정성의 장기화’, ‘지구온난화와 환경생태적 재앙악화’에 직면

- 우리나라는 세계 11대 경제대국(1조 4,112억 달러 규모의 GDP 세계 11위(2016))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세계 1위의 고령대국으로 재벌 대기업의 독과점, 높은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비율, 가계소득 감소, 청년실업, 높은 불행도와 자살률 등 사회구조적 불평등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의 비극을 맞이하였음
- 2015년 기준 로봇밀도는 제조업 분야 노동자 1만명 당 531대(세계평균 69대)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후 AI 등 발달과 자동화의 진전 등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 될 경우 고용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전 세계가 경제위기를 넘기 위한 양적 완화정책을 통해 긴급한 현안을 넘겼기 때문에 ‘저성장과 경제적 불안정성’은 장기화 될 것이고, 온실가스의 축적 등으로 지구온난화에 의한 환경파괴는

더욱 심각해질 것임

- 우리가 직면한 4대 중대 도전과제는, 1970~90년대 발전국가모델 하에 대기업과 특정 지역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경제적 기적을 이루었으나, 급격한 규제완화와 외환위기 등을 겪으면서 급격한 양극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나타났음

##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 한반도의 공동번영, 세계모범국가로 나아가야

### ■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비전을 ‘혁신적 포용국가’, ‘공동번영과 평화의 한반도’, ‘세계 모범국가’로 제시

- 혁신적 포용국가(예, 노르웨이, 덴마크 등 노르딕 국가)는 포용성(약자의 포용, 세계취약국의 포용, 자연의 포용), 혁신성(교육과 혁신 R&D), 유연성(작은 개방경제)이 모두 높은 수준에 다다른 국가로, 우리나라도 우리에게 맞는 포용성, 혁신성, 유연성을 적절히 조합하면 새로운 한국의 기적을 만들 수 있음
-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더 이어지기 위해서는 남북 공동비전이 필요한데, 한반도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번영하고 함께 세계에 기여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로 제시할 수 있음
- 세계모범국가는 세계를 위해서 보편적 기준과 규범을 세워서 세계를 더 평화롭게 하여 상호이익을 공유하자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문화의 힘, 지식의 힘, 평화를 사랑하는 힘, 환경·생태를 지키는 힘인 글로벌 소프트파워 전략이 필요함.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이미 가지고 있는 하드파워(군사력·경제력)와 소프트파워를 더한 스마트 파워(세계포용강대국)를 갖게 될 것임

### ■ 대한민국, 선진국을 향한 제2의 도약 필요

- 선진국이란, ‘존재하지 않는 길, 가보지 않는 길을 찾아보고, 오지 않은 빛을 끌어들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최진석, ‘탁월한 사유의 시선’, 2017)’로 아직 형체가 분명하지 않은데서 형체를 상상하고 형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를 말함
- 우리가 만약에 선진국으로 가고자 한다면, 해보지 않은 생각을 하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임



# 제1부. 해양도시와 해양관광 활성화

## 발표 1. 해양도시, 미래와 정책방향

김종덕 KMI 정책동향연구본부장

최지연 KMI 해양수산 지역발전 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해양도시, 지리적 접근을 넘어선 종합적 발전체계 구축 필요

#### ■ 해양과 관련한 직접적인 활동의 공간적 기반인 해양도시에 대한 정책 미흡

- 1996년 해양수산부가 발족되면서 부문별 해양산업정책은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국토계획이나 도시계획 등에서 제한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해양산업 차원에서 기본적인 점·선·면 공간활용에 그치고 있어 도시 전체의 해양성을 활용한 활동은 파편적이고 단절적 이용에 그치고 있음

#### ■ 해양의 지배가 곧 세계의 지배로 이어지며 해양의 가치 확산

- WWF(세계자연보호기금 : World Wide Fund for Nature) 추정에 의하면 전 세계 해양의 자산 가치는 연간 24조에 이르고 이는 해양 GDP는 세계수준 7위 수준임
- 하지만 이는 95%의 해양이 미개척인 상태를 전제로 한 수치이므로 향후 해양의 발달 가능성과 그 가치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됨

#### ■ 세계 해양개척을 선도하는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 OECD 평가에 의하면 2030년 세계 해양경제 부가가치는 3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하며 일 자리는 500만개에서 1,200만개로 증가되고 특히 해양관광, 항만, 해양장비 등의 분야에서 높은 성장이 예상됨
- 이는 연안과 해양이 세계경제는 물론 인류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향후에 더욱 커지며 혁신



적인 해양도시는 글로벌 해양경제활동의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해양력이 국가경쟁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 2022년 해양수산업의 GDP는 10%대로 올리고 핵심글로벌 지표 세계 5위권 수준 제고

- 정부는 현재 2.4%에 머물고 있는 해양수산업의 GDP를 10% 내외로 끌어올리고 핵심글로벌 경쟁력 지표를 세계 5위권 수준으로 제고하려는 목표를 가짐
- 따라서 해양도시는 효율적인 도시의 공간이용과 관리체계에 기반한 국가 해양력의 공간거점으로 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기대됨

### ■ 세계의 경제 해양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양도시 미흡

- 세계의 1,000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의 2/3는 해양도시이며 이는 전 세계 GDP의 55%를 점유하고 주요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계 핵심거점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Menon Economics(2017)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표적 해양도시 부산은 전 세계 13위 수준의 해양도시 및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항만물동량의 항목에서만 부각될 뿐 다양한 도시의 기능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소 지구, 항만 또는 도시 전체의 해양산업 혁신을 위한 노력

### ■ 해외의 주요 해양도시의 움직임 및 트렌드 파악

- 아이슬란드의 레이카비크는 대표적으로 수산자원을 이용한 산업구조인 도시에서 1960년 이후 지속적인 수산자원의 감소를 수산식품특화지구 지정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함
- 특히 아이슬란드 오션 클러스트라는 대표적인 회사가 창업하면서 90개의 기업이 유치되고, 각 기업들은 융·복합 사업을 통해 해양수산업의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독일의 함부르크는 대표적인 항구도시이며 300년간 북유럽을 지배했던 항만도시이지만 2000년대 초반 급속한 해양관련 사업이 쇠퇴되고 그로인한 도시 공동화가 발생함
-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를 발족하고 북유럽의 클러스터로서 함부르크가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2011년에 비해 약 20~30%의 경제성장, 고용확대, 물동량 증대의 도시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일본의 요코하마는 항만의 기능이 쇠퇴하면서 도시가 함께 쇠퇴하는 것을 극복하고자 2000년대 요코하마 재부흥을 위해 “임해부가 강한 요코하마 만들기”라는 전략을 구축함
- 항만 주변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구성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창출하면서 스마트 일자리가 창출되기 시작하며 또한 재해의 안전한 연안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여 해양도시로 거듭남

## 수산인적자원, 해양금융, 산업·기술이 결집된 해양강국 기틀 마련

### ■ 해양도시 체계 구축과 특성화, 해양권역별 네트워크형 해양도시 구축, 해양도시 소프트웨어 인프라 조성, 해양수산 지역혁신 역량 강화 전략 마련

-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각 지역 맞춤형 정책지원이 필요함, 예를 들어 거점형 해양도시로 발전하는 곳, 향후 스마트 신 해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에 대해 각각의 도시의 성격, 도시의 자연·인력 자원과 환경에 맞는 정책지원체계를 마련해야함
- 해양의 지역별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6+1 연안해양권역별 발전구상을 통해 서해안과 동해안, 남해안과 제주연안이 각각의 고유산업과 자원을 활용한 해양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힘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함
- 해양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생태적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해양도시가 새로운 소프트웨어 및 인프라를 제공하고 이를 중심으로 해양발전을 이루는 근거지로서 역량을 강화함
- 해양수산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과 중앙의 협업이 필요하며, 항만·어촌·도서 중심의 지역혁신 신성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함

### ■ 신 해양도시 정책의 핵심은 해양산업의 성장, 해양강국의 실현을 위한 중앙정부와 경쟁력 높은 해양도시를 지향하는 지방정부간의 협업 체계 구축

- 중앙정부는 해양수산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도시발전, 시민복지를 증진을 목표로 하고 지방정부는 국가의 해양수산 산업의 전략수용을 통해 경쟁력 높은 해양도시를 구축하려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협업이 신 해양도시 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음
- 중앙과 지방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해양도시 조성 육성을 위한 지역의 집행 관리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발표 2. 해양관광과 지역발전 활성화

홍장원 KMI 해양관광·문화연구실장

### 해양관광, 관광도시와 지역발전 전략의 연계 사례 부족

#### ■ 해양관광을 지역발전에 도입을 위한 고민과 갈등 해소방안 모색 필요

-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언급하며 관광을 통해 지역이 성장을 하고 발전이 가능하다고 함
- 그러나 높은 관심과 달리 해양관광을 지역발전전략으로 성공시킨 사례가 적고 이는 해양관광도시 혹은 관광도시를 구분하지 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관광시장변화에서 해양관광, 시장변화, 국내 해양관광의 현황과 발전과정, 해양관광발전 방안에 관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함

#### ■ 물리적인 인프라 확충을 넘어선 소비트렌드 파악을 통한 관광사업 지속 필요

- 지속적인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관광시장은 연평균 4%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관광의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이 낙후되거나 발전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음
- 2018년 관광트렌드는 자연자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이루어야하고, 일시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각기 다른 나라에서 보내주는 특성을 가진 크루즈 관광에 익숙해져야함
- 또한 대량관광의 시대에서 최근 자연 속에서 치유하며 즐기는 관광형태로 나홀로 관광, 단기관광에 대한 수요가 높음
- 따라서 현재 관광 트렌드를 파악하고 수요에 맞춘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시장을 확대시키는 방안이 시급함

### 국내외 관광의 변화에 맞춘 해양중심 관광 시장 선도

#### ■ S.T.A.R.T(스타트), 새로운 국내관광 트렌드의 시작

- 2018년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관광시장의 주 트렌드를 START라고 명명하였는데, 이는

Staycation(당일치기, 근거리 여행), Travelgram(여행스타그램, 여행주간), Alone(혼행, 나홀로 여행), Regeneration(도시재생, 원도심여행), Tourist sites in TV programs(여행예능, 드라마촬영지)의 약어임

- 종합하면 단기여행, 나홀로여행, 원도심 여행이 새로운 관광행태로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트렌드는 원도심과 떨어져 있거나 단기 혹은 당일 관광이 힘든 교통성 등의 특징을 가진 해양관광에 긍정적이지 못한 현상임
- 현재 관광트렌드에서 해양관광이 뒤지지 않기 위해서 소비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

## ■ 국내 관광시장의 동향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해양관광 활성화 대책 필요

- 국내관광의 지속적인 문제는 관광수지가 나빠지고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임. 이는 해양관광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국내해양관광시장의 경쟁력 개선이 필요함
-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관광수지 개선, 국내 관광시장을 육성하고 외국관광으로 수요를 뺏기지 않고 국내관광으로 유도할 수 있는 아이템 개발 등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정책 마련이 필요함

## ■ ‘쉽표가 있는 삶사람이 있는 관광’, 국가 관광전략과 지역해양관광 활성화 연계 발전 모색

- 2017년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방향을 ‘쉽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으로 제시함
- 이는 관광기회의 확대와 관광콘텐츠 발굴, 지역관광 육성과 연계하여 전국적인 해양관광 활성화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해양관광의 경우 여행 성수기가 계절성이 크게 나타내어 만족도가 연중 제고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관광 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이 국한되어 나타남
- 관광목적지는 관광활동의 증가, 여가시간 증가 등 지역에 대한 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에 대응한 관광 발전을 모색해야 함

## ■ 해양관광의 성장기, 성숙기 등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통한 대중화 확대 필요

- 해양관광의 성장기에 있는 지역은 대중화를 위한 방법 전략 모색, 성숙기는 매력도를 증진시키는 방안 모색 등 지역별로 관광수요를 만들어 성장에 대한 대중화 확산에 기여해야 함

## 국가 관광 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 기여 등 지역 해양관광 발전의 실현을 위한 발전방향 모색

### ■ 해양을 보고 느끼며 해양만이 가지는 문화를 통해 해양관광도시 브랜드 구축

- 우리나라는 해양관광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전국 연안 시·군에서 해양관광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전무한 실정임
- 지역 해양 관광산업의 육성이 시설의 구축과 공간 조성이 아니라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하고 문화 자체를 도시 브랜드로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함
- 즉 지역관광사업의 육성이 지역 친수문화 구축이 중심이 되고 이는 지역관광수요의 창출과 해양 관광의 다계절화를 유도하는 선순환적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최근 지역에서는 해양관광자원 발굴, 공간정비를 위한 지속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해양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해양공간의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는 등 도시의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음

### ■ 해양관광활동의 편견과 갈등은 “바다의 접근성을 강화”를 통한 해결 기대

- 접근성이라는 것은 물리적·심미적 접근성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바다의 접근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됨
- 어업인과 레저인의 갈등, 같은 레저활동 유저들간의 갈등, 환경과의 갈등, 사업체와의 갈등, 이용 상충의 갈등 등 민간사업자들이 관광활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의 갈등요소 해결은 접근성 해결과 연계되어 있음
- 관광활동 공간을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후 지역수요를 만들고 지역 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의 조성이 필수적임

### ■ 지역마다 차별적인 지역관광 발굴과 활용을 통한 해양관광의 다양화 마련

- 지역의 해양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지역해양문화상품 제작을 지원하는 등 특색이 있는 지역해양 문화공간을 정비하고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스토리를 가지고 작은 관광을 통한 감동경험을 줄 수 있는 해양관광 활동이 필요함

## 제1부 토론.

## 「해양도시와 해양관광 활성화」

좌장  
토론자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  
송삼중 부산광역시 해양수산국장  
조인권 인천 해양항공국장  
류인권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박정주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제주 해양수산국장  
성보현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 [부산] 해양관광·레저산업의 거점도시 도약 실현

## ■ 천혜의 해양공간, 다양한 시설 인프라구축, 전문 인력 양성, 산업의 거점도시로 자리매김

- 부산은 항만물류에서는 세계 5~6위 순으로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해양도시 순위는 11위권으로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른 해양기능들이 열악한 편임
- 부산시는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해양관광육성을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도시의 7개의 해수욕장을 가진 최적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 대회 등을 통한 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
- 해양레저·관광 전문 인력 양성교육기관도 다양하고, 선박대여업, 수상레저업, 해양레저장비 및 용품제작 및 수리업 등 해양레저산업의 거점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노력중임

## ■ 2016, 해양레저관광의 지원과 체계를 위해 해양레저 전담조직인 해양레저과 신설

- 앞선 2015년도 「마리나항만법」을 개정하여 요트대여업, 계류업 창업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선박 대여업이 40개 이상 증가하고, 만 명 이상의 부산시민들이 해양스포츠에 새롭게 입문하고 있음
- 시민·언론들의 해양레저 및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레저나 관광 등의 수요증가에 체계적·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해양레저과’를 신설함

- 또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예산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로써 「해양레저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조례」를 수립함

##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완화 및 개편으로 해양산업 활성화 견인

### ■ 수상레저 등록업에 대한 권한의 일원화를 통한 새로운 산업 활성화

- 수상레저사업장은 내수면은 구군 기초자치단체에서 등록을 하고, 해수면의 경우 해경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음
- 부산시 해운대구의 경우 수영강에서 해운대 앞바다로 이어지는 해양레저 및 관광 사업을 위해 바다는 해경, 내수면 수영강은 구군에서 받는 이중적인 등록규제와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일원화 하여 수상레저등록업의 규제 어려움을 완화시킬 제도가 필요함

### ■ 타법에 의한 보호구역 내 레저 및 관광활동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 및 강화 필요

- 부산의 낙동강 내수면 해상레저 산업은 철새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등의 타법 규제사항에 의해 인프라 구축이 힘들고 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임
- 환경평가 및 활용 가능성 평가 등을 통해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통해 지역별 특화된 레저시설 및 활동이 진행 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함

### ■ 해양레저 및 관광사업의 무료 체험 정책들로 인한 해양산업 전반의 가격경쟁력 왜곡

- 해양레저 저변 확대, 대중화 확산 등을 위해 체험교실, 무료 사업들이 진행되지만 이는 관련 산업들을 왜곡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 시민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와 사업자 공급가액들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과정 및 정책 지원이 필요함



## [인천] 항만보안·군사보호구역 등 공간적 한계 극복 방안

### ■ 2,500만 수도권 배후인구를 흡수하지 못하는 제약적인 해양 공간 및 시설 부족

- 인천시는 역사적인 유물, 항만, 도서 등 다양한 해양레저산업과 관광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만 해안지역 대부분이 군사보호 구역 또는 항만 보안구역으로 접근이 제한됨
-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한 해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교통망,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관련 볼거리가 부재함

### ■ 해양 공간 개척을 통해 보고, 느끼고 즐기는 해양관광 발전 모색

- 인천시는 인천서구 오류동(서해)~한강(서울 강서구)을 연결하는 경인아라뱃길 개통(18km)을 통해 여객·유람선을 이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추진 계획을 구축함
- 국내 레저선박 수와 요·보트 조정면허 취득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마arina 시설 확충 부분은 미흡한 실정임
- 특히 한강에서부터 이어지는 수도권 마arina, 요트 이용자들을 위한 인천 앞바다의 다양한 도서에 소규모 마arina 계류 시설을 구축하여, 육지와 도서를 연결하고 낙후된 도서의 어항시설을 활용한 소규모 요트장 확대를 추진계획에 있음
- 또한 연안 여객선 대중화를 위한 여객 운임을 지원하여 인천시민은 여객운임의 80%, 타, 시도민은 50%를 지원하고 있음
- 현재 다양한 보안·보호구역으로 접근이 어려운 해안대신 해로운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인천시의 해양가치를 증진시키고 해안철책선 제거, 문화공간조성 등 구체적인 사업 실행 중임

## 대규모 배후도시, 분단국의 접경구역을 접해있는 특수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개발 필요

### ■ 자치단체별 개발 순위부여 및 특성을 고려한 개발 추진

- 수도권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타 도시와의 무한 경쟁, 접경구역으로 인한 제한구역 분포라는 많은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경기] 해양레저 관광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해양레저 및 산업의 장기적·기술적 접근 필요

### ■ 해양레저 잠재수요가 많음에도 해양레저·어업관광 등 관련 프로젝트 미흡

- 경기도는 전국 인구의 65%의 배후인구 수요를 가지며 해양레저·어촌 체험 관광 요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러한 해양레저 인구를 체계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음
- 경기도 전체 사업에서 해양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지 않아 경기도에서 관심이 크지 않고, 현재 경기연구원에 해양항만 분야의 전문가들이 없는 실정임
- 경기도는 2018년 해양레저관광육성을 위해 자체연구를 수행하고, 2019년에는 「경기도 해양레저 관광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및 수도권 국민들의 해양레저·어촌관광 등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함

### ■ 신 성장 동력 해양관광 산업 과제 발굴에 노력

- 경기도는 해양레저 활동이 증가하면 해양안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하여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운영을 통한 해양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 중임
- 해양아카데미를 활성화하여 유인도서 스킨스쿠버 교실 운영, 어린이 갯벌체험현장 및 관광 프로젝트 등을 개발하여 해양관광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수도권 대표 마리나항 건설 및 평택항 종합발전계획 마련을 통한 항만 개발을 통한 해양관광 및 산업 발전 모색

### ■ 단계적 마리나항 건설과 항만 주변 친수 공간 조성을 통한 해양레저 활성화 여건 마련

- 2018년도 제부마리나항(300척 규모)의 완공을 시작으로 2019년 방아머리 마리나항 착공을 위한 실시시설계중이며 2019년 해양아카데미교육장 개설을 통한 해양레저 활성화 여건 마련 예정임
- 또한 평택항이 물류항만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친수항만이 되어 항만기능과 더불어 관광 친수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택항 종합발전계획 마련이 필요함

## [충남] 적극적인 인력유입 제도 마련을 통해 해양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활력 있는 연안·어촌 조성

### ■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연안산업 및 관광육성의 어려움을 귀어 귀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으로 극복하려는 노력

- 도시의 고령화 비율 전국 1위, 65세 이상 어가인구 전국2위 등 수산과 어촌지역의 인구구성이 노령화되고 이에 따라 1차 산업 중심의 수산업, 어선 노후화, 어업인·업종 간 갈등 심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 어촌계 가업조건을 완화 하여 자격을 확대하고, 거주기간 및 가입비를 완화 하여 어촌의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서 다양한 해양수산 관련 인력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함

### ■ 수산, 가공, 유통의 단계에서 나아가 체험·관광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 전통수산업이 약화됨으로써 어민들의 어업 외 소득을 일정이상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촌 체험·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기반을 마련함
- 이는 해양역사문화 기초조사, 해양수산 탐방코스 발굴 등 스토리를 발굴하여 지역의 차별화된 요소를 부각한 작은 관광을 지향하고, 잡는 어업에서 관광과 접목한 소득창출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보장하여 지속적인 인구유입 및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음

## 어촌분야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적용대상 범위 확대 필요

### ■ 해양수산부, 어촌개발사업의 영역 확대와 어촌 특성에 맞는 정책 마련

-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어촌분야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어 124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연안 읍면동은 505개로 나머지 381개는 농촌·어촌 둘 중 어디에도 지역의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어 대상지역의 범위 확대가 필요함
- 향후 예산과 해양수산부의 사업대상 영역을 확대해 어촌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 필요함

## [제주] 지방분권 시대에 대응하는 지방해양자치권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 연안 12마일 이내 영해의 지방자치권을 이용한 수산자원, 해양광물자원, 공유수면 등 지자체의 관리 권한 이양 필요

- 현재 사·도간 해상경계 획정이 되어 있지 않고, 일부 연안어업 분쟁 발생 및 선망 등 일부 대형 어선들이 제주도 연안 주위에서 조업하는 실정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연근해는 난류성 어족의 회유로 및 월동장·산란장으로서 제주도 내 어장의 자원고갈은 곧 우리나라 수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영해 12해리는 지방자치권을 가지고 자원, 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지만 현재 책임 주체가 없고 제도도 미흡하여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국가 차원의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에서 영업구역을 사·도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 17조에서 이를 따로 완화하여 연접수역의 낚시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 제주해역의 특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타 시도 낚시어선으로 인한 해상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함
- 한·일 EEZ 입어협상이 정부 간 의견차이로 협상이 장기화 되어 일본 EEZ 내 갈치조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정부의 입어협상 타결 및 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크루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내국인 수요 및 인식 확산 노력

### ■ 크루즈항만, 계획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닌 내국인의 수요확충과 크루즈에 대한 관광 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

- 크루즈와 관련해 제주뿐만 아니라 부산, 인천, 여수 등 다양한 지역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나 외국 크루즈 관광 수요에 의존하여 해외 변수에 따른 산업 영향이 매우 큼
- 따라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의 수요확충에 노력하여 시장 다변화가 모색되어야 함

## [충북] 인공호의 수산자원을 이용한 내수면 관광활성화 계획 시도

### ■ 내수면 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형 해양관광 전략 제시

- 충북은 해양공간과 맞닿아 있지 않지만 충주호·대청호 등 대규모 내수면 관광자원이 존재하여 이를 활용한 관광산업 정책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관광행태가 주변산길을 활용한 트레킹, 유람선을 통한 경관감상 등 수상레저 활동 측면의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형태가 주를 이룸

### ■ 지역별 관광활성화 전략과 내수면 관광의 가치 및 수요증가에 따른 지역간 갈등 양상

- 충주시(충주호), 제천시(청풍호), 단양군(단양호) 등 내수면 관광자원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요구가 거세지는 추세임
- 충주호는 제천시 지역(청풍호)를 중심으로 케이블카 설치, 모노레일 설치, 내수면마리나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청풍문화재단지 및 리조트 등이 기 조성되어 있고, 단양군은 담수 어종 아쿠아리움 다누리센터의 성공으로 내수면 관광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고 최근 내수면 관광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계획도 구상하고 있음. 충주시는 조정경기장을 중심으로 카누·카약 체험시설 및 내수면 마리나 조성을 신청하고 활성화 계획을 마련함

## 지역주민들과의 공간, 소득공유를 통한 내수면 자원 활용 관광 개발 필요

### ■ 관광자원 개발보다 지역주민들의 지역관광에 대한 공간 공유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

- 충주호·대청호는 댐 건설로 생성된 인공호수로, 호수 생성이전에 주변 지역주민들은 전형적인 농산촌업에 기반을 두어 수자원에 대한 이해와 애착이 다른 해양공간의 어촌 주민에 비해 낮은 편임
- 내수면을 활용한 수상레저 활성화 및 대규모 개발사업 유치에 역량이 집중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관련되는 내수면 어업, 양식단지 등의 지원이 확대되어 내수면에도 어촌이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들의 자원에 대한 애착도 올릴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제2부. 수산·어촌지역의 혁신생태계 구축

### 발표 3. 어촌의 지역재생과 추진방향

박상우 KMI 해양수산지역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인구감소·지역 여건 변화·지역소멸 등에 따른 어촌지역 공동화,  
어업 쇠퇴현상 발생

#### ■ 연안·어촌의 인구 이동 및 지역 여건 변화

-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주요 광역도시 및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인구밀도가 높아지면서 도시지역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지난 2010년까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입이 이루어졌으나 2010년 이후 귀어·귀촌에 따른 역도시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어촌지역으로의 인구 순유입효과가 나타남
- 도시어촌지역의 인구는 늘어나는 반면에 비도시어촌지역의 인구는 감소·정체하는 추세를 보이므로 실질적으로 어촌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한다고 해서 연안지역에 고른 인구 분포 현상을 보이지는 않음
- 어촌지역의 노령화, 인구 감소 등의 현상으로 지역공동화, 도서의 무인화,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어촌지역도 입지여건이나 특성에 따라 지역소멸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 ■ 인구감소·지역소멸 우려에 나타나는 어촌지역의 쇠퇴

- 일본에서 지방소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일본 총무성, ‘과소지역 집락에서 발생하는 문제’, 2016)를 살펴보면 일자리 감소, 빈집 수 증가, 폐교에 따른 인구유출, 공공 교통의 편리성 저하 등의 모든 기반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나타남



-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면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서비스는 정비·강화되고 있으나 어촌 지역은 상대적인 소외를 비롯한 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공공서비스는 더욱 열악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어촌지역 내만에 양식장들이 많이 입지함에 따라 오수처리 문제가 정주문제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어장밀집지역은 하수도 보급률이 38%로 전국 71%에 비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지역인재 유입 부재, 수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안전사고 등), 어촌지역 내 폐교 수 증가 등이 어촌지역의 쇠퇴를 가속화시킴

## 공공서비스 강화, 실질적인 정주여건 개선 등 어촌지역 재생방안이 마련되어야

### ■ 공공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어촌지역 재생방안 마련

- ‘어촌뉴딜 300 프로젝트’를 통해 어촌지역의 소외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 재생을 도모하되, 하드웨어적 인프라 확충만이 아닌 소득과 일자리, 젊은 인재 유입 등 지역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략 및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일본은 도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에 의한 지역 공동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내각부, 총무성,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이 본연의 사업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되, 지자체가 각 부처의 핵심적인 사업들을 지역 여건에 맞춰 지방소멸 관련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특징임
- 어촌지역을 어업집락으로 구분하여 6,000여개의 실질적인 어업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유형화와 여건들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어촌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어촌지역의 열악한 여건들에 대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어촌 공동체, 어촌지역의 인력, 제반 여건들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

### ■ 어촌지역 재생을 위한 과제

- 지역의 수산·어촌 인력육성(일자리 창출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재생 전담부서 기능 강화, 범부처 사업 매칭 및 지자체 사업 발굴, 청년 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재생 창출전략 마련이 필요함



- 맞춤형 귀어정책 추진, 도시민 등이 찾고 싶은 귀어·귀촌, 귀촌인과 지역주민이 어울리는 어촌마을 조성 등의 귀어·귀촌 유입의 촉진방안 마련이 필요함
- 수산·어촌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추진을 통해 공동체 강화, 수산자원 환경관리,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함
- 청년 선호 일자리 요소 파악, 정부 일자리 정책, 청년 일자리 창출 공모를 통한 청년 인재 유입을 통한 창직·창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어촌의 생활서비스를 강화하여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신규 인구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발표 4. 바람직한 해양수산 스타트업 (혁신)생태계

양동우 호서대학교 교수

###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생태계 벤치마킹

#### ■ 창업벤처 생태계 구축 요소

- 창업벤처 생태계의 성공적 사례로 실리콘밸리가 꼽히며, 성공요인으로는 실리콘밸리를 구축하는 사람과 인력배출에 있음
-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을 배출하는 대학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며 실리콘밸리에서는 스탠포드 대학교와 U.C. 버클리 대학교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해양수산벤처생태계를 이용해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학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와 투자방식 지원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음
- 해양수산벤처생태계는 ① 대학, ② 벤처 캐피탈, ③ 강력한 기업가 정신, ④ 정부, ⑤ 문화(실패 용인, 재창업, 공정성)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음

#### ■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교육 체계 구축 및 창업발전에 따른 지역 활성화 필요

- 해양수산 관련 교육기관의 교육 커리큘럼이 해양수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인재 발굴이 필요함
- 지역개발, 창업 개발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창업이 발전함에 따른 지역이 발전하는 순환 고리 생성이 중요함

#### ■ 창업기업 주도의 창업 지원 투자 및 재창업 기회 제공

- 실리콘밸리는 창업보육기업과 지원기업이 하나의 운영체로 작동하며, 창업보육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의 지분매각(주식)을 통해 추진됨
- 우리나라는 정부지원을 받은 공공창업보육센터가 대부분이며, 정부예산에 의한 인큐베이터가 많음
- 실리콘밸리는 창업에 실패했을 경우 재취업이 용이하며, 투자방식이기 때문에 재창업을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융자·보증방식이 많기 때문에 창업에 실패하게 되면 부작용이 상당히 커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한 상태임

- 우리나라는 창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끝나면, 사후관리가 없는 문화가 문제이며, 창업 벤처기업의 모델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내수에 한정되어 있음

## 해양수산 벤처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존의 창업지원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 ■ 해양수산 벤처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패러다임의 전환 및 방향 설정

- 우리나라의 해양과 관련하여 어획량 불확실성, 양식어업 주도의 성장, 어가인구 감소 및 노령화, 생산수단의 노후화, 어촌공간 침체화, 수산물 안정성 관심 확대, 수산물 수입의 악순환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연역적, 규범적 판단보다는 시장 및 지역의 요구에 맞게 지원하며, 지역개발차원의 스타트업 육성이 아닌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지역개발 등의 지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 개선방향으로 ① 우수인력 양성 및 어촌 유입 유도, ② 양식산업 활성화, ③ 고가격/고품질의 수산물 생산, ④ 어촌해안공간의 Startup Valley화 등이 있음

## 발표 5.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재정과 지역발전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 인구 노령화, 생산가능·가임여성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우려

#### ■ 인구 노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 우리나라 인구는 2015년에 5,100만 명에서 2031년에 5,300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인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성장가능인구 중에서도 고령 층에 속하는 50~64세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15~24세 층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임

#### ■ 가임여성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과정 진행

- 일본에서는 지방소멸에 대해 인구변수와 지방소멸을 연결시키고 있으며, 인구변수 중에서도 가임여성인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가임인구 여성은 20~39세로 보며, 핵심은 지방에서 젊은 여성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다음 세대가 태어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여성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있는데 1995년에 831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중요한 변수는 고령인구 대비 20~39세 여성인구 비율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한명 당 젊은 여성 인구가 1965년에 4.6명인 것에 반해서 2015년에는 1.1명으로 줄고, 2065년에는 0.2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됨
-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젊은 여성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2004년에 6개 지자체의 젊은 여성 인구가 10% 미만이었었는데 2014년에는 77개로 증가하고 특히, 전남, 경북 등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음(한국고용정보원, 2016)
- 향후 30년 내 82개 군지역 중에서 69개소(84.1%), 읍면동지역(3,482개소) 중에서 1,383(39.7%)이 소멸할 것으로 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16)

## ■ 지역인구 위축의 문제점

- 주민 삶의 질 관련 지역 양극화가 심화되며, 지역의 인구 감소가 유발한 교육·의료·보육 등 기본 정주여건의 미비가 다시 인구유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초래됨
-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가 수반하는 행정기구 인력 감축은 농어촌 지역의 유지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행정비용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농림수산업 및 전통제조업이 붕괴될 우려가 있음
-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인구증가 둔화 및 지역경제 침체는 경제성장률 저하의 한 원인으로 꼽힘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세원 조정 필요

### ■ 인구고령화·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세원 조정은 불가피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부동산거래세의 축소로 부동산보유세의 비중 확대는 필연적이며, 타 국가에 비하여 낮은 부동산보유세의 조세부담율과 실효세율은 보유세 확대 가능성을 시사함
-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의 조세부담율은 0.68%로 타 국가의 1.58~2.59%에 비하여 낮은 편이며, 실효세율은 0.15%로 주요 OECD 국가와 비교하여 0.17~1.25%p 세율이 낮음
- 지역 간 세수격차 측면에서도 거래세 대신 보유세를 확대하는 것이 세수불균형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세의 지역 간 세수격차는 보유세의 확대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인구감소지역의 세입 축소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구축 필요

### ■ 인구감소지역의 세입 축소에 따른 지방 재정지원 체계개편 필요성 대두

- 인구감소지역의 세입 축소에 따른 재정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되, 중앙 및 지방의 재원을 떠나서 ‘이전재원’을 활용하되 지방세의 다른 변수들을 이용한 이전재원화 방안 배제라는 대전제를 설정해야 함

##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 추진체계 부재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

- 지역발전사업 단위별 전담 부처의 소관분야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 요구와 괴리되고 사업 지침도 불일치하여 일선 시·군·구 혼란이 가중되고 정부 지역발전사업과 지역의 도시·군기본계획 간 유기적 연계 미비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효과적 정책 추진체계가 부재함
- 개편방안으로 기존 경제발전계정 중 각 부처 지역개발 관련 예산을 안배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계정을 신설하고 하나의 추진체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정책 수립·운영이 필요함
-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예산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 보통교부세 개선을 통한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재정 지원

- 보통교부세 중 기초수요액 중에서 인구를 측정단위로 하는 측정항목의 기초수요액 비중이 75.7%에 달할 정도로 인구 변수의 영향력은 지대함(지방행정연구원, 2017)
- 인구가 많을수록 보통교부세가 많이 적용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개편이 필요함
- 보정수요액 중 지역균형수요에 인구감소지역 관련 수요를 반영 또는 보정수요액 항목에 ‘인구감소지역 발전수요’를 신설하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함

##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활용을 통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기준금리 이하로의 융자 검토

-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시·도 간 수평적 재정조정 재원으로 2019년까지의 기간 연장, 인구감소위험지역 비율의 배분기준 추가,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 기준금리 이하로의 융자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

-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감면을 고려할 수 있음
-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고려할 수 있음
- 인구감소지역 소관 지자체에 한해 재산세 표준세율에서 50%를 가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의 검토도 가능함

## 제2부 토론.

## 「수산·어촌지역의 혁신생태계 구축」

좌장  
토론자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  
강승구 전라북도 농축수산물국장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  
민정식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  
변성균 강원도 환동해본부장  
권혁준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전북] 어업 기반체계 약화에 따른 어업소득 저하 등의 위협  
요소와 해양산업 확대 및 창업 기회 요소의 혼재

## ■ 어업세력 감소에 따른 어업 기반체계 약화와 수산물 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업소득 저하

- 어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신규 어업인력 진입장벽 및 어업의 제한적 허용 등에 따른 어촌 공동화 및 저성장이 우려됨

\* 어가 : ('06)4,549호 → ('16)3,167호(감 30.4%) / 어업인 : ('06)13,181명 → ('16)7,092호(감 46.2%)

- 기후변화에 따른 연근해 어업환경 악화, 자원 남획 등에 의한 수산물생산량이 감소함

\* 생산량 : ('11)71,309톤 → ('16)63,576톤(감 10.8%) / 생산금액 : ('11)2,422억 5,500만 원  
→ ('16)2,281억 3,900만 원

## ■ 새만금 신항만 건설에 따른 해양산업 확대 및 창업 기회

-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상에 2조 5,482억 원(국비 1조 4,102억 원, 민자 1조 1,380억 원)을 투입해 중국 수출입 거점항만 건설('11.~'30.)을 추진 중임



## 어촌지역 경제력 강화를 위한 발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 내수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계획 수립

- 전라북도는 내수면 양식장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내수면어업이 전국에서 최고로 활성화되어 있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내수면 양식장(17) : 전북 250ha(전국 872ha의 28.7%)
- 내수면산업 발전을 위한 '전북 내수면어업 육성 및 6차 산업화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음

###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육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및 어촌관광 활성화

-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실현하고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창출을 위한 어항기능의 다양화를 추진 중임
- 어촌관광시설 확충 및 해양레저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어촌특화지원센터를 활용한 귀어·귀촌 활성화 등 신규 어업인력 육성 및 어촌으로의 유인이 필요함

### ■ 어업인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강화

-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운영으로 마을 특화개발, 특산품 레스토랑 등 어촌6차 산업화 추진과 고부가가치 전략 품목 생산량 증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 수산분야 보험료 지원,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등 경영안정을 위한 장비 및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어업활동 보장 정책을 추진 중임

## 어업·어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준 완화 및 소득어종 자원감소 대책 마련해야

###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도서 선정기준 완화

- 수산직불금은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므로 연륙되었다고 당장 육지와 같아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서개발촉진법」에서 정한 기간을 조건불리지역으로 관리가 필요함
- 연륙된 도서를 조건불리지역으로 10년간 관리하도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침' 개정이 필요함

## ■ 수산업경영인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 어업기반조성을 위해 초기에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회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산업 정책자금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수산업 진입장벽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수산업경영인(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정책자금 금리 및 융자기간 조정이 필요함

## ■ 수산자원보호와 소득이 공존하는 방안 강구

- 자원 확충, 어선 감척 등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한시어업 제도를 마련하여 소득화가 가능하나 승인이 까다로움
- 수산자원보호는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이 목적이므로 소득화를 위한 정책당국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함

## ■ 서해안 주요 소득어종 자원량 감소 대책 마련

-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환경 악화 등으로 전어, 꽃게, 주꾸미 등 서해안 어족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함(생산량 : '08)3,900톤 → '16)1,115톤(감 72%)

# 어촌지역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어업인 육성과 어촌선진화 도모

## ■ 내수면산업 및 청년어업인 적극 육성

- 내수면 양식어종의 소비 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유통·가공·체험·관광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는 민물고기 클러스터 조성으로 내수면산업의 활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 청년 인턴사원 채용 지원 등 우수인력 어촌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 및 추진이 필요함

## ■ 어촌 뉴딜사업 등을 통한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

- 어촌의 특성과 다양한 자원의 연계개발을 위해 일부지역에 한정된 대상시군을 어촌 전체시군으로의 확대가 필요함
- 어촌·어항 등 생활밀착형 시설에 대한 투자확대 및 시설 재생으로 어촌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어촌뉴딜300 사업규모 확대가 필요함

## [전남] 어촌지역 재생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 주민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 귀어·귀촌 범위 확대 제도 개선 필요

- 실제 어촌지역에서 타 직업·분야에 종사하다 귀어를 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나, 현재 ‘도시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를 요건으로 하는 귀어인 통계에는 제외되고 있음
- 어촌지역에서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귀어를 희망할 경우에도 귀어인으로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귀농어를 희망할 경우에도 귀농 어업인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 연안여객선 이용객 1,000만 시대 접안시설 확충 및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지원

- 2017년 전남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2016년(848만명) 보다 약 8% 증가한 911만 명으로 집계되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였으며 5년 평균 이용객은 8,450천 명(일반인 5,925명, 도서민 2,525명)으로 전국의 54.1%를 차지함
-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소규모 항포구는 여객선 접안 시설 미비로 여객선 직접 접안이 불가하므로 여객선 접안시설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함
- 2007년부터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섬 주민의 영토 수호자 측면에서 도서지역 공동화 방지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어촌지역으로의 청년인구 유입 및 어촌 정착 유도 방안 마련

### ■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어업인 후계인력 육성

- 어가인구는 2016년 말 전국 12만 5,600명 중 전남은 4만 4,200명으로 전국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60세 이상 어가인구는 43%를 차지하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 의존, 저임금 등으로 청년들 어촌정착을 기피하는 실정이며 안정적인 어촌정착 인력의 확보가 시급함

## ■ 일자리 창출 관련 도(道) 추진사업을 통한 청장년층의 안정적인 어촌정착 유도

- 양식어장 청년 고용지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도우미 지원, 유희수면 활용 유망품종 창업어장 개발, 고흥 귀어가 양식어장 개발 등의 도(道)추진사업 실시 중임
- 어촌활력 제고와 어촌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품종별 현장교육 실시가 필요함
- 수산계고교, 대학생 어업현장 취업 시 인건비 지원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지원이 필요함

## [경남] 수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패류양식산업 클러스터 구축

### ■ 경남 수산업 현황

- 경남 수산물 생산량은 '17년 경남 수산물 생산량 60만 톤, 전국 생산량(326만 톤)의 18.4% 차지 하였음
- 양식생산량은 38만 톤으로 전국 생산량(231만 톤)의 16.4%, 양식어업권(12천ha)은 전국 면적 (149천ha)의 8%를 차지함

### ■ 패류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 방향

- 경남도는 미국 FDA 수출용 패류생산지정해역의 75%를 보유하고 있어 생산 해역 안전성과 위생적 우수성을 활용한 패류산업의 발전이 기대됨
- 수산물 수요 대응을 위한 양식생산량 증대가 필요하나, 바다 공간 공유와 환경오염 등으로 친환경 기반 양식산업 도입이 절실하며 패류산업은 양식과정 중 사료와 배설물 오염 부하량이 적어 친환경양식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함
- 굴에 편중된 패류 산업구조와 겨울철 집중 출하에 의한 안정적 경영 애로, 유통 의존형 유통 구조 및 가공상품 개발 부족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경남 권역별 자생적으로 조성된 패류 품종의 보편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수출 품종 및 수출국 다변화, 수출상품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속적 산업 발전 견인이 가능할 것임

## ■ 패류양식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제언

- 경남 패류 권역화의 특성을 살려 해역별·품종별 특화단지 조성 및 종자생산, 가공, 위생, 유통, 수출 통합형 양식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함
- 개별업체 등 단위로 추진되던 소규모 인프라 사업을 종합적으로 구조화하고,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 단계 분야의 동반성장을 통한 안정적 산업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패류양식업 고도화, 경쟁력 확보로 수출시장 전략적 개발 및 수출 증대, 패류양식 산업 활성화로 고용창출 증대 및 경남 수산 대표산업으로의 육성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됨

## [강원] 각종 어업규제 및 제약요건과 인구변화에 따른 어업 생산량 감소 등이 강원도 수산업 발전의 한계요소로 작용

### ■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수산업 발전 저해

- 강원 북단의 동해상은 어로한계선 설정으로 조업제약, 해변지역의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와 제약이 수산업 발전 저해요소로 작용함
- 동해안 연안해역은 해안선이 단조로워 외해의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에 해상 가두리 등 양식 시설물의 설치·관리가 어려우며,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해상시설물에 의한 양식어업의 경쟁력이 타 해역에 비해 취약함

### ■ 인구 초고령화 단계 진입에 따른 어촌 공동화 우려 및 어업생산량 감소

- 잡는어업 중심의 강원도 어촌은 타 지역에 비해 급속한 어가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초고령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어촌의 공동화가 우려됨(어업 가구 2,549호('00 대비 54%↓), 인구 6,118명('00대비 67%↓))
- 연근해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유지하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감소하는 추세임(생산실적 : ('00)60,687톤→('17)45,841톤, 24.5↓)

## 동해안 해양환경의 특성을 활용한 해양수산 발전방안 모색

### ■ 동해안 특성을 활용한 다른 해역과의 차별화 도모 및 고품질 수산물 생산, 청정 해양환경의 가치 중요성 부각

- 연어·돌기해삼·가리비·우렁쉥이 등 경쟁력 우위품목 양산, 심층수 활용 명태자원 회복 및 산업화를 추진 중임
- 요트 등 서핑의 최적지, 넓고 깨끗한 백사장, 해안경관 등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동해안 접근망 개선이 필요함
- 동해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부각, 북극항로 상용화시기 도래, 국제크루즈선 유치 가시화 등 환동해권을 둘러싼 국제교류 활성화 및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미래 전략품종 육성·글로벌 경쟁력 강화

### ■ 연어·명태 양식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오징어 자원감소 및 대책 강구

- 연어 외해가두리 양식 성공적(16,400톤) 진행과 명태 인공 2세대 종자의 생산·방류(30만 마리) 함으로써 완전양식 기술개발 성공(16) 등으로 산업적 육성이 가능해짐
- 오징어는 단년생 회유성 어종으로 중국어선 동해 북한수역 입어조업, 해양생태환경 변화 등에 의한 자원량이 감소하였으며, 오징어 자원회복은 강원도의 독자적 대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강화, 제도개선, 경영지원 등의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함

### ■ 동해안 특성에 맞는 특산품종 육성 및 앞바다 어장의 생산 잠재력 극대화

- 돌기해삼 종자배양장(삼척) 및 감가리비 종자생산시설(도) 건립, 씨뿌림 양식확대 등 브랜드 특화 산업 육성이 필요함
- 연안어장 어·패류 산란·성육장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 바다목장화, 수산자원플랫폼구축 등으로 지속가능한 소득어장 개발이 필요함

## 수산물식품산업 육성 및 명품브랜드화와 어촌·어항 중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 ■ 수산물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산업 육성

- 내수형 단순가공 중심을 수출 주도형 선진 가공단지·R&D·수출지원 기능이 집적된 ‘수산물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산업 육성이 필요함
- 어항개발이 낙후된 지역은 주변 자연경관, 수중 비경 등을 활용한 해양관광 개발이 어려워 어업 외 소득전무, 상대적 소외감이 팽배하므로, 정부 ‘어촌뉴딜 300 사업’과 연계하여 항포구 실태조사를 통한 어촌 재창조 다기능 복합어항 개발유형 발굴 추진이 필요함

##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어업 소득기회 확대해야

### ■ 대서양 연어 위해우려종 지정 해지 및 오징어 자원감소에 따른 대책 강구

- 환경부에서 성장이 빠르고 양식에 가장 적합한 대서양 연어를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여 2016년부터 양식용 발안란 수입이 불가함에 따라 전 세계 연어양식 비중을 감안하여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함
- 오징어는 생태특성상 인위적인 자원회복이 어려워 중앙정부 차원의 장기간 자원을 보호·관리해야 회복이 가능함
- 중국어선 동해 북한수역 조업 관련 동해안 어업인 북한수역 입어조업 협상과 피해업종 경영안정 지원확대 및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공조조업 단속, 처벌기준 강화 등 대책 강구가 요구됨



## [대구경북] 동해안 수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개편과 정책 수립 추진

### ■ 동해안의 특성에 따른 어선어업 중심의 발전과 어업인구 감소에 따른 수산업 기반의 약화

- 경북 수산업은 산지가 해안까지 연장된 단조로운 해안선과 깊은 수심, 외양성 환경으로 양식업보다는 어선어업 위주로 발전하였음
- 수산업 생산량은 2011년 14만 3,000톤 → 2016년 11만 9,000톤, 어업가구는 1975년 약 1만 2,000호였으나 2016년 2,818호로 감소하였으며, 어가인구는 1970년 약 6만 5,000명에서 2016년 6,668명으로 나타남으로써 어업인구감소에 따른 수산업 기반이 약화되는 것으로 확인됨
- 영일만 신히는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계획대비 낮은 수준의 예산투입으로 지역 주요 무역항 육성에는 한계가 있음

### ■ 조직 신설·개편과 해양수산 정책 수립 등을 통한 경북 동해안의 역할과 역량강화 도모

- 환동해지역본부 출범은 신도청 이전에 따른 동남권 주민들의 행정불편 최소화과 해양, 수산, 에너지, 원자력 등 현장기반형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동해안권 5개 시·군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
- 경북 해양수산을 발전시키기 위해 2014년 신동해안 해양수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역 차원의 해양수산발전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 중에 있음

## 관광단지, 6차 산업화, 자원 보호 및 회복, 특화양식품종 육성 등이 경북 동해안의 주요 현안

### ■ 해양치유(헬스케어) 관광단지 조성

- 해양치유 가능자원 발굴 및 산업·실용화 연구추진('18~'19)을 통해 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울진군 평해읍 월송정 주변에 해양치유 R&D센터, 치유센터 등 건립 추진 예정임('20~'22)

## ■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등 6차 산업화

- 수산물 유통 환경 및 소비 유형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산지거점유통센터, 가공단지조성, 처리저장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포항신항 배후단지 내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을 제안함

## ■ 대게 자원 보호 및 오징어 자원회복을 위한 대책 강구

- 경북 동해안지역 대표 특산물인 대게는 전국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 대표 어종으로 최근 불법조업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지역간·업종간 조업분쟁이 발생하는 등 대게 자원관리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함
- 자원회복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규제 강화 등 장기적인 계획을 가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자원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POST 경상북도 해양수산’을 위한 동해안의 기능 확대, 수산 자원 회복, 어촌개발, 관광지대 조성 추진

## ■ 해양 신산업, 환동해 및 유라시아 교류 등 기능 확대,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 대책, 균형있는 해양도시 및 어촌개발, 웰빙·힐링 해양관광지대 조성 추진

- 환동해·유라시아 물류 및 자원개발 거점, 항만물류 특화기능 대폭 강화, 북극항로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함
- 경상북도 주요 수산자원인 대게 및 오징어에 대한 장기적인 자원회복계획을 마련하고 보호·육성이 요구됨
- 지역 무역항(영일만신항)을 중심 항세권 개발로 항만 배후단지 및 산업단지를 연계한 해양 신산업을 육성해야 함
- 해양연구기반(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등)과 교육기반(국립해양과학교육관, 국립청소년해양센터) 등을 연계한 해양과학연구 및 교육 중심지로 조성해야 함
- 전통과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역사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해양문화관광을 육성하고 청정환경을 이용한 힐링 관광상품 육성 및 6차 산업화의 전략적 추진이 필요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지보다 더 심각한 소멸위기지역, 섬

### ■ 섬지역은 육지와 달리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환해성, 격절성 등이 내재

- 섬지역은 바다로 둘러싸여 육지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환해성(사면이 바다), 격절성(주변지역으로부터 분리·격리), 협소성(일정한 공간적 범주에 갇혀 있음)이 내재하고 있음
- 도서가 갖는 제한성으로 인해 인구가 점차 감소하여 지역낙후성의 악순환이 발생함
- 교통 및 접근성 불리, 산업기반 및 정주생활환경 열악, 지역중심성과 공간통합성 결여, 인구유출과 고령화 등에 취약함
- 우리나라의 472개소의 유인도서 중 연륙도는 66개소로 14.0%에 불과하나, 연륙도서에 인구기준이 85.9%가 집중되어 있어 섬인구의 대다수는 연륙도서에 거주함

### ■ 섬지역은 우리 국토의 중요한 일부분이자 주민들이 삶을 이어가는 정주공간

- 입지적인 불리성, 교통 불편성, 수자원 부족, 배후여건 등 정주환경이 갖는 여건을 개선해주고, 농수산업 등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 21세기 해양의 시대, 석유, 해양에너지 등 해양자원과 영해의 지리적 범위를 둘러싼 국가 간 분쟁 심화에 따른 해양국가안보와 국토의 외연적 확산 등에 있어 섬의 중요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세계적인 관광추세가 내륙관광에서 해양관광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 섬지역이 가지고 있는 해양문화와 다양한 관광자원 등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음

## 섬지역과 관련된 법제도의 다원화

### ■ 섬지역과 관련된 법률은 대상도서의 성격에 따라 다원화

- 섬지역 관련 법률은 대상도서의 성격에 따라 크게 「도서개발촉진법」(행정안전부), 「무인도서법」(해양수산부), 「도서생태계법」(환경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음
- 도서개발촉진법상 지정도서에 대한 예산지원도 2010년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이후 특수상황지역(행정안전부)과 성장촉진지역(국토교통부)으로 분할되어 각 지역별로 해당 중앙부처가 사업의 예산 집행과 사업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개편되면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과 낙도 보조항로 지원사업, 도서지역 어업인 소득관련 사업 등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환경부에서, 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등은 산업부에서 추진함

## 우리 국토의 중요한 일부분, 섬 지역 정책방향

### ■ 주민의 꼭 필요한 정주공간인 섬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발전정책 추진

- Post-2015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이념인 지속가능발전(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목표를 지향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관점에서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도서발전정책 수립이 필요함
- 일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도서에 거주하더라도 정책상 배제되지 않고, 육지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받으며 생활인프라 및 공공서비스에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포용되는 정책이어야 함

### ■ 도서종합개발계획을 도서종합발전계획(master plan)으로 재편

- 도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소득창출, 생활환경개선 및 복원, 도서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등이 되도록 모도 중심의 생활권별 발전 계획 수립이 필요함

### ■ 도서민의 법개정 수요를 폭넓게 반영하는 제도 개편

- 도서를 개발·이용·보전하는 방향과 이념에 관한 도서기본법이 필요하며, 도서는 국토의 일부이자 도서주민의 삶의 터전으로서 도서의 균형 있는 발전, 도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서와 주변 해역의 환경보전 및 영토수호 등을 이념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함
- 일본은 「이도진흥법」의 이념과 목적을 시대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4차 개정 목표는 ‘해양자원의 이용’, 5차 개정의 목표는 ‘국가의 영역보전’, 6차 개정에서는 ‘무인도서 방치 및 인구정착 촉진’을 강조함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균특회계 도서개발사업 재편

- 이원화되어 있는 균특회계 도서개발사업을 재편하여 전체 도서를 대상으로 섬의 특성과 사업의 특성별로 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지원이 필요함

## 해양 수산 교육 기회 확대 및 어촌지역 주민 갈등해소 방안 마련 필요

### ■ 정부의 귀어·귀촌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홍보 기회 제공과 어촌지역 활용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갈등 해소 방안 마련

- 정부가 귀어·귀촌 관련 지원 정책에 집중하고 있지만 폭넓은 교육·홍보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며 임해지역에 있는 해양수산 관련 교육기관을 도심에 설치하여 ‘찾아가는 교육 제공’이 필요함
- 어촌지역 사람들과의 갈등을 기다리는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레저로 발생하는 상당 부분을 주민들의 복지 기금으로 주는 제도 등의 갈등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바다의 공유재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레저인구의 질서익식, 관리 참여 등의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시 사 점

### ‘해양수산 전국포럼’의 성과 공유와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 2018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는 ‘해양수산 전국포럼’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구성된 것으로, 전국포럼은 지역 해양수산업의 혁신성장과 공동발전을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시도연구원, 시도, 지역대학 등과 국토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해 해양수산 지역발전 거버넌스의 역할을 수행

- ‘해양수산 전국포럼’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해양수산부, 12개 시도와 시도연구원, 지역대학, KMI,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지역단체, 지역기업과 언론 등이 참여하는 지역 해양수산업의 공론의 장임
- 강원연구원(17.9.27)을 시작으로 충남연구원(17.11.6), 광주전남연구원(17.12.5)과의 전국포럼 지역 세미나 공동개최를 통해 해양수산 지역현안을 발굴·공유하고, 지역현안의 합리적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5개 시도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도시와 어촌, 해양산업과 기술, 산학연, 중앙과 지방, 타 분야와의 연계강화를 통해 해양수산 지역혁신성장을 도모해야

■ 해양수산업의 무한한 가치와 잠재력을 해양연안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공간산업주체부문간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양수산 지역혁신성장의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 노력 필요

- 해양수산 지역혁신성장은 지역 바다의 색깔처럼 그 가치를 얼마나 특성화산업화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수산·항만·해양관광 등 해양수산 부문을 넘어서 국토·산림·산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협력이 필요함
- 연안·해양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항만과 어항·어촌 등 한정된 해양 공간을 넘어 배후도시인구를 흡입할 수 있는 해양도시로의 공간구조재편, 소멸위기의 어촌의 신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수산업



의 고부가가치화, 어촌 유희공간과 잠재자원, 해양어촌문화유산의 활용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함

## ■ 도시와 농어촌, 섬과의 연결, 지역기반산업과 해양수산업 간의 연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연결, 지역과 지역의 연결 등 강한 연계망에 기반을 둔 해양수산 지역혁신성장체제 구축 필요

- 해양의 특성인 ‘유동성(流動性)’과 ‘연결성’은 지역과 사람·산업 등은 본질적으로 연관 짓는 고유 속성으로, 이를 반영한 해양수산 지역혁신성장체제를 구축하여 연안·해양 중심의 해양·국토종합관리 체계 수립이 필요함
- 인접한 지역을 묶어 특색 있는 해양도시권을 만들고, 유사한 해양특화사업을 하는 지역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만드는 최상위 해양수산 지역발전 계획이 필요함

## 해양수산 고유의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공동 아젠더 발굴과 지역 맞춤형 실천과제 제시 필요

### ■ 시도에서 이행 중인 해양수산 관련 정책과 사업이 지역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 지역발전과 관련한 공동의제 발굴 필요

- 현재 각 시도에서 추진 중인 항만물류수산·해양관광·해양자원 개발 등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국 사도에 적용 가능한 공동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해 단계적으로 달성해 나감에 따라 지역 해양수산 혁신성장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적 기반 구축이 필요함

### ■ 해양수산 지역혁신성장 관련 공동의제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지역의 장점과 역량 등을 고려해 지역맞춤형 실천과제 발굴과 이행 필요

-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 해양의 가치와 잠재력을 활용해 지역의 차별화된 특성과 스토리 등을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실천과제 발굴이 필요함
- 해양관광의 경우, 천편일률적 해양관광보다는 지역적 차이를 부각한 지역 해양관광사업을 발굴하여 작지만 희망이 보이는 선도모델로 만들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특화 해양관광사업 추진



이 필요함

## ■ ‘소지역’과 ‘마을’로부터 해양수산 혁신생태계 구축 필요

- 어촌뉴딜 300프로젝트와 연계한 소지역·마을기반의 해양수산 혁신생태계 구축하여 어업 외 소득을 일정 이상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청년들이 창의적으로 창업하거나 안정된 일자리를 찾고,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개발 추진 등 작지만 강한 연안·해양지역을 만들기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함

## 연안·해양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해양수산 지역 소프트 인프라 확충 시급

### ■ 사도에서는 해양수산 혁신성장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싶으나, 지역 해양수산 전문 인력의 부족, 해양수산 연구교육훈련 관련 기관의 지역적 편중 등이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 사도에서는 해양수산 관련 지역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연구교육 기관 등이 부산 등 대도시에 집중해 있음에 따라 각 사도의 해양수산 혁신정책과 사업 발굴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지역 해양수산 균형발전과 지역정책사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해양 관련 전문인력 유입·양성, 해양수산 관련 지역연구소·대학, 해양수산 기업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등 지역 소프트 인프라 확충 필요

##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행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TEU 이상 줄어듦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업·수산물,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 자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방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간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자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알리바바,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구분	제목	발행일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첨병!,로봇·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생이모자반,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북방경제 협력 기회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방역체계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적,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 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업직불제 제도 개선 방향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2017.11.15

구분	제목	발행일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북극 과학연구 강화를 위해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5
제60호	제19차 당 대회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 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제66호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2018.01.10
제67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2018.01.17
제68호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 -범부처 R&D 추진필요-	2018.01.24
제69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8.01.31.
제70호	해상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추진 필요	2018.02.07.
제71호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 대상 홍보 강화해야	2018.02.07.
제72호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2018.02.14.
제73호	중국 '북극정책백서' 공식화로 북극 투자 증가할 듯	2018.02.21.
제74호	스마트항만(Smart Port), 전체 물류망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필요	2018.02.28.
제75호	대형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활용방안 강구 필요	2018.03.09.
제76호	연안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중심 대응방안 마련 시급	2018.03.14.
제77호	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018.03.21.

URL : <http://www.kmi.re.kr/>